

민주 전당대회 경선 절차 본격 돌입

당대표 5명·최고위원 14명 경쟁... 오늘 예비경선 후 전국 순회 거쳐 내달 17일 새 지도부 최종 선출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경선 절차에 본격 돌입했다. 민주당은 16~17일 후보 등록을 마감하고, 21일 예비경선을 실시한 뒤 전국 순회경선을 거쳐 8월 17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전국 당원대회에서 새 지도부를 최종 선출한다. 기호는 △1번 김민석 △2번 고민정 △3번 정청래 △4번 김보미 △5번 송영길 후보로 배정됐다. 최고위원 선거에는 모두 14명이 출마했다. 후보자는 기호 순으로 △박선원 △이건태 △이성운 △김용 △박성준 △박승원 △정민철 △한민수 △서

미화 △최민희 △김영호 △임마애 △신계륜 △김형남 후보이다. 이번 전당대회는 당원 중심의 선거제도 개편이 가장 큰 특징으로 꼽힌다.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은 대의원·권리당원 투표 70%, 국민여론조사 30%를 반영해 결정된다. 특히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포를 동일한 기준으로 반영하는 이른바 '1대 1' 방식이 처음 적용된다. 기존에는 대의원 1표의 영향력이 권리당원 약 17표에 달했지만, 이번에는 권리당원 1인 1표제가 도입되면서 권리당원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됐다. 정치권에서는 이를 민주당 당내 민주주의와 지도체제 변화의 중요한 분수령으로 평가하고 있다. 예비경선은 21일 선호투표 방식으로 진행된다. 당 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의 권역별

투표 일정은 △충청권 28일부터 31일까지 △부울경 29일부터 8월 1일까지 △제주·인천 8월 4일부터 7일까지 △강원·대구경북 8월 5일부터 8일까지 △호남권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서울·경기 8월 1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다. 특히 호남권 투표는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나흘간 실시되며, 전북·전남·광주 권리당원과 대의원들의 선택이 당대표 경선 판세를 가를 최대 변수로 꼽힌다. 최종 결과는 8월 17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전국 당원대회에서 발표된다. 민주당은 권역별 투표 결과와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해 당대표와 최고위원 등 새 지도부를 선출할 예정이다. 새 지도부는 향후 지방선거 이후 당 운영과 내년 주요 정치 일정 전반을

이끌게 된다.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경선 후보 등록이 완료됨에 따라 관련 일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관리를 진행하게 된다. 전북은 권리당원이 19만4,000여명으로 전국 권리당원 대비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에 당 대표와 최고위원 출마 후보자들의 전북 방문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지난 주말 송영길 후보와 고민정 후보가 전북을 찾아 지지를 호소한 바 있으며, 지난주 금요일 밤에는 김민석 후보의 부인 이태린 여사가 김민석 후보 지지 모임에 참석하여 김민석 후보의 지지를 호소한 바 있다. 한편 우리 지역 출신 이성운 국회의원(전주율)도 검찰개혁 완수를 위해 또다시 최고위원에 도전한다. /이만호 기자



민주 전대 예비경선 합동연설회 20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전당대회 예비경선 합동연설회에서 당원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 정청래 전 대표, 송영길·고민정 의원, 김보미 전 강진군 의원 등 최고위원 후보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제공)

‘전북교육청, 정책은 의문? 소통은 부족!’

도의회 교육위, 부교육감 대상 정책 질의... 인사 정상화·민주시민교육 재점검 등 촉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전용태)는 20일 제43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열고 유정기 부교육감을 상대로 한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에 돌입했다. 특히 교육위원회는 천호성 교육감의 새로운 교육 정책 방향과 주요사업이 일선 교육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와의 소통과 협치를 강조했다. 전용태 위원장(진안)은 도교육청의 정가인사 지연으로 인한 6급 이하 공무원들의 불이익과 사기 저하 문제를 물었다. 전 위원장은 "8급 이하 공무원들은 인사가 제때 나지 않으면 수당과 봉급 등에서 실질적인 경제적 손해를 입는다고 지적하며 "좋은 정책을 추진하려면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먼저 갖추어져야 한다"고

포력했다. 이뿐 아니라, 일선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 사이에 '혈오표현'이 일상화되고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역사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이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도 의원(전주1)은 천호성 교육감 취임식과 관련해 집행부의 사전 조율 부족과 의회 소통 미흡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공식 초청과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점을 예로 들며, "행사 날짜까지 본회의 일정과 겹쳐 의원들의 참석이 어려웠다"고 꼬집었다. 이어 일부 교육청이 의례적인 취임식을 생략하거나 최소화한 사례를 언급하며 "전북교육청도 예산절감과 민생안정을 위해 취임식 행사를 보다 간소하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장연국 의원(전주4)은 "새로운 교육감

의 인사정책이 사람 중심의 통제가 아닌 실무 중심의 업무 장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대의가민인 의회와의 긴밀한 소통 협력 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최종오 의원(익산1)은 의회의 자료제출 요구와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앞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청이 자료 요구의 취지와 목적을 충분히 안내하지 않은 채 일선 학교에 공문을 시행해 일부 학교에서 혼선과 문과가 발생한 것 아니냐"며 "향후에는 교육청 차원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처리 방안을 구축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책국과 대변인을 시작으로 21일 교육국과 행정국 22일 13개 직속기관, 23일 14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혁신당 도당, 이원택 지사 '새만금 카지노 추진' 규탄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정도상)은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새만금 복합리조트(내국인 출입 카지노) 유치 추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이효진 조국혁신당 최고위원(사진)은 "도민과의 사전 교감이나 공론화 없이 추진되는 새만금 카지노 계획은 주민을 기만하는 '밀실 도박 정치'라며 "도민 주권을 외치던 전북도정의 퇴행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후보 시절에는 도민 반대를 의식해 숨겨왔던 카지노 추진 계획을 취임 직후 '물지마 식'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도민에 대한 명백한 무시이자 독단적 행정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구체적인 로드맵과 타당성 검토도 제시되지 않은 채 추진되는 이번 결정은 이 지사가 강조해 온 '도민 주권'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만금 카지노 추진의 문제점으로 △외부 자본 의존 심화 △도박 중독 등 사회적 폐해 △첨단산업 거점으로서 새만금의 브랜드 가치 훼손 등을 꼽았다. 특히 "지금 새만금은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해야 할 골든타임인데, 이를 도박장으로 낙인찍는 것은 스스로 미래를 포기하는 자해 행위와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북 정치권을 향해 "논란을 키우는 카지노 대신,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분명한 산업 전략과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당은 "정당한 공론과 절차를 무시한 일방적 추진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새만금이 전북의 건강한 미래를 여는 터전으로 남을 수 있도록 끝까지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전북 금융생태계 조성 구체적 추진계획 마련해야”

도의회 경산건위, 기업유치지원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동구)는 20일 제430회 임시회 기간 중 도 기업유치지원실에 대한 202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기업유치와 일자리 지원이 협력 체계여야 지원 건수에 그치지 않고, 실제 투자와 기업가동 청년 고용 등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구 위원장(군산)은 한국판테크지원센터 전북본원 유치가 무산된 이후 사업명이 전북판테크지원센터 지정·운영 지원사업으로 변경된 배경을 질의하고, 전북 금융생태계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마련할 것

을 주문했다. 윤지홍 부위원장(남원1)은 기업유치와 일자리 정책의 중심에 청년이 있어야 한다고 하며, 기업 중심의 간접지원에서 벗어나 청년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취업·창업 지원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박병철 의원(비례)은 업무보고 자료에 중복된 내용이 많아 주요 성과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실제 창출된 일자리와 청년 일자리 수를 명확하게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노사민정 협력 거버넌스를 시군까지 확대하고, 농협중앙회 등 지역 금융기관과 연계한 금융생태계를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 김나영 의원(비례)은 창업기업이 14

개 증가한 것과 관련해 실제 매출과 고용 투자유치 증가로 이어졌는지 질의하고, 팀스(TIMs) 사업 등 창업지원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할 것을 주문했다. 서난이 의원(전주9)은 업무협약 해지 내용이 자료에서 누락되는 등 사업별 추진상황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임승식 의원(정읍1)은 반도체 산업 유치 과정에서 전북이 소외된 데 대해 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김영자 의원(김제2)은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건의 시점이 업무보고 자료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서 다르게 기재된 점을 지적하고, 정확한 추진 경과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만호 기자

“자임추도공원 임시 정상운영안주 할 때 아냐”

김성수 도의원, “유족 불안 가중 제도적 불세 여전”
도의회 차원 조례 제정·국회 등 대상 법 개정 등 제안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성수 문화안전소방위원회 위원장(고창1)은 최근 임시 정상 운영 중인 전주 자임추도공원에 대해 “행정의 임시방편으로 같듯이 수면 아래로 잠시 내려갔을 뿐, 유족들의 불안을 가중하는 제도적 불씨는 여전하다”라며 전북자치도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원택 도지사가 지난 13일 취임 첫 기자회견을 통해 ‘자임 사태에 대해 어떤 결론이든 신속히 매듭을 지을 것’이라는 결단을 환영한다”면서도 “신임 지사가 도민 일상과 밀접한 민생현안을 최우선 과제로 인식한 것은 고무적이나, 진정한 ‘매듭’은 일시적 개방이 아니라 유골이 사유재산 분쟁의 불모로 잡히지 않도록 인허가 및 사후 관리 구조를 전면 개편하는 것”이라고 제언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현 자임추도공원은 소유권과 운영권이 기형적으로 쪼개져 있어 언제든 재폐쇄

나 관리 부실 등의 물발 사태가 재발할 수 있는 구조적 위험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나탈자가 정당한 운영 자격 없이 소유권만 주장하며 유족들에게 고통을 주는 일을 막지 못하는 ‘장사법’(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치명적인 허점이 해소되지 않는 한, 등록된 1,400여 유가족의 불안은 물론 안전된 1,800여 위(位) 고인의 안식조차 보장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도의회의 선제적 대응 방향과 실효성 있는 3대 해결 대안을 제시했다. 3대 해결 대안으로 도의회 차원의 시설 장사시설 안심 관리 조례 제정 추진, 도내 사설 장사시설 운영 실태 전수조사 조속 착수, 국회 및 정부 대상 ‘장사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발의 등이다. 김성수 위원장은 “고인의 마지막 존엄을 지켜주는 것은 지방정부의 기본적인 책무”라며, “이원택 지사의 조기 해결 약속이 말에 그치지 않고 행정 현장에서 결과로 입증될 수 있도록, 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회가 사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견인차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도내 기초의회 전반기 첫 회기 돌입

정읍시의회(의장 이복형)는 20일 제315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8월 3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10대 정읍시의회 전반기 의정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서항령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시민 중심의 시내버스 노선 개편과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산미 의원은 폐목재 화력발전소 사례를 바탕으로 주민의 알권리와 참여권을 위한 주민주권 조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남희 의원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과 관련, 생백신 무료접종은 유지하되 사백신을 선택하는 시민에게도 일정 금액을 지원할수 있는 방안을 건의했다. 이번 임시회는 21일부터 29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202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며, 30일부터 31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8월 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을 처리한 후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남원시의회(의장 한명숙)가 20일, 9일간의 일정으로 제282회 임시회를 개최했다. 남원시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남원시로부터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등 주요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지역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적극적인 정책 제안과, 5분 자유발언에 나선 김정현 의원, 소태수 의원, 이기열 의원, 마우현 의원은 시장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고, 이상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향후 의정활동의 비전을 공유했다. 한명숙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10대 남원시의회는 ‘시민과 함께 동행하는 책임의회’를 기치로 내걸고 출범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 민생현장을 발로 뛰며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는 것은 물론, 집행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며 잘못된 방향은 바로잡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신뢰받는 의회상을 확립하겠다”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기자

김제시의회(의장 이정자)가 제10대 전반기원 구성을 마친 뒤 첫 임시회를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김제시의회는 20일부터 31일까지 12일간 일정으로 제288회 임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7월 7일 제10대 의회 출범 이후 전반기원 구성을 마친 뒤 처음 열리는 회기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조례안 및 일반회원심사 등이 진행됐다. 첫날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는 김영자 의원이 ‘도시재생 활성화 방안’, 장민우 의원이 ‘새만금 대전환 시대 미래 100년 성장축 확보’, 김승일 의원이 ‘스마트팜 농산물상품권’을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장현안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시의회는 새만금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 위원을 선임했으며, 소회의실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보고받았다. 오는 21일부터 24일까지는 각 부서별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27일부터 28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 조례안과 일반회원 및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다. 이어 29일부터 3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하며, 회기 마지막 날인 31일 제6차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을 최종 의결한 뒤 임시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정자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제10대 의회의 실질적인 첫걸음을 내딛는 이번 회기를 시작으로 시민의 복지와 안전한 일상을 최우선으로 챙기고, 소통과 실천으로 신뢰받는 의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시민 민생 안정과 직결되는 중요한 예산인 만큼 시민의 혈세가 낭비 없이 적재적소에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심사와 향후 집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김제=곽노태기자